

보도자료

- 발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다, 녹색당
- 수신 : 각 언론사
- 제목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북쪽 100미터 근방)
- 문의 : 여옥(전쟁없는세상) 010-5183-0036 /yeook.yang@withoutwar.org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10-5573-1497 /hanui.choi@amnesty.or.kr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3.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 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4.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5.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기자회견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 일시 :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북쪽방향 100미터 근방
-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다, 녹색당

<순서>

사회 :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1.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이번 공개변론이 갖는 의미
: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2. 수감을 앞둔 병역거부자로서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점
: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3.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최근 한국 병역거부 상황 보고서 발간이유 등
: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 병역거부는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 보편적인 양심의 문제
: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5.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

* 퍼포먼스 : 참가자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으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감자를 상징하는 창살 모양의 피켓과 죄수복, 그리고 해결을 상징하는 열쇠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전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현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 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 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다, 녹색당